

사라지는 외국인 노동자…전남 양식장 일손 없어 ‘발동동’

원도군 소안도에서 김·다시마 양식을 하는 신종식 소안면 어촌계장(50)은 요즘 인력 애기만 나오면 한숨부터 나온다. 3년째 출국과 입국을 반복하며 일해왔던 한 외국인 직원이 갑자기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신 계장은 “직원 3~4명 중 한 명이 도망가 버렸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현장 이탈을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원도에서 매생이 수확을 하는 차민진(54)씨는 일을 배울만 하면 고국으로 떠나야 하는 외국인 직원들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차씨는 “어촌에 청년들이 없으니 외국인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외국인들도 단속만 떴다 하면 우르르 빠져나간다”며 “단속으로 현장 인력이 빠져 나갔을 때 발생하는 조업 차질은 누가 책임져주나”고 한탄했다.

어업 현장 계절근로자 이탈 잇따라…김·다시마 수확 차질
정부 뾰족한 대책 없이 단속만…눈뜨면 야반 도주 ‘악순환’

전남도의회 인력난 해소 위한 긴급 회의 열어 대책 모색

논·밭 뿐 아니라 바다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이탈’ 문제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단속을 강화하면 한쪽에서는 노동자들이 줄어들고 망쳐 버리는 현상이 잇따라면서 어민들은 현장

인력 부족과 일손 부족으로 인한 어업 피해를 막을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단기 취업 비자를 가진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높은 노동강도, 생활 편의·여가시설 부족 등을 핑계로 불법을 감행하고 어촌을 떠나 도심인 광주로 이탈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높은 전남 어촌 현장의 인력 공백이 커지고 있다.

14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최근 외국인 노동자 이탈로 인한 어민 민원이 잇따라면서 ‘인력난 해소를 위한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전남 지역 20개 시·군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만 1만 1275명. 해남(2062명), 보성(1717명), 무안(891명), 진도(886명), 영암(878명), 나주(708명) 지역 논·밭, 바다 양식장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법무부와 지자체가 각각 관리하는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은 최대 8개월로, 기간 연장은 할 수 없다. 이외 비전문취업, 숙련 가능 인력, 선원취업의

경우에는 체류기간이 3년이다.

하지만 계절근로자 등이 체류 기간 만료 시점에 다가오거나 일이 힘들다 싶으면 ‘야반 도주’를 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적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가 이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통제는 커녕 이로 인한 인력난과 어민 피해가 얼마나 될지에 대한 점검 조사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어민들 주장이다. 정부가 내놓은 어업분야 인력수급 대책과 농촌 인력지원 확대 방안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호소도 나온다.

섬 지역에 사는 어민들의 경우 목포 등 육지의 출입국사무소 출장소까지 가서 외국인 노동자 보험 등록절차를 밟고, 각종 비용을 납부하는 등 하루 일을 통째로 비우는 수고를 감수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오더라도 당일 저녁에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게 어민들 하소연이다.

도의회도 이같은 어민들 민원을 감안, 전남도 관련부서들과 계절근로자 확대 방안, 농촌 인력 지원

시스템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대응책을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손이 비는 어한기 내 타 업종 일시 허용, 지자체 수협이 운영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제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장, 올해 운영된 공공형 계절근로제 15곳을 내년도 25곳까지 늘리고 시·군 관내에서 가능한 근무 지역을 타 시·군 인력 중개센터와 연계해 다른 지역에 서도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외국인들 이탈 원인으로 꼽히는 ‘농동 강도가 센 열악한 업무’와 ‘짧은 체류기간, 임금·근로시간·숙소 기준 강화 등에 대한 보완 방안은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김문수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에 수학 철에는 관련 단속을 완화해줄 것을 건의해달라고 요청했으며 현지자체의 문제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줄이은 온정의 손길 14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에서 한 어린이가 구세군 자선냄비에 성금을 넣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 170억원대 사기 혐의 징역 4년형 선고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이 자금 경색을 해소하려고 투자자들에게 170억원대 사기를 벌였다가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상영(46)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한방병원 직원 A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원장은 지난 2019~2020년 광주 지역에서 한방병원 사업을 확장하면서 지역 기업인, 투자자 등으로부터 176억원을 벌리고 깊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병원 자금 6억원을 횡령한 혐의, 병원 직원들에게 4억 7000만 원 상당의 국민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국민연금 위반죄)도 적용됐다.

이 원장 등은 채무 변제 능력이 부족한데도 피해자들에게 고액 이자를 약속하며 돈을 벌리고, 벌린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등 ‘돌

려막기’ 식으로 돈을 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는 과정에서 상환이 급박해지자 운영 자금, 기존 채무 변제, 자금 경색을 해결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담보 없이 거액을 벌려준 피해자들에게도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회생 계획에 따라 채무 변제를 지속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김영록 지사 미역·매생이 고사 현장 찾아 완도 어민들 만나 피해 최소화 방안 모색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완도 지역 미역·매생이 양식 어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고사 피해(광주일보 11월 28일 7면 등)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살피고 대응 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완도군 악산면 득암어촌계 미역 양식장을 찾아 어민들에게 피해 상황을 청취했다.

완도 금일·청산·금당면 미역 양식장에서는 미역 업체가 탈락하고 고사하는 현상이 잇따르고 있으며, 매생이 양식 농가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 완도에서는 지난달 중순 이후 미역 업체 탈락과 고사 피해로 2931어가, 17만 3029줄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는데, 완도군 전체 미

역 시설량의 59%에 달한다.

정확한 업체 탈락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업인들은 수온 정체와 난류 유입, 해조류인 양영 업 부족 등을 꼽고 있다. 특히 10월 초·중순 수온이 양식 적정수온(18~20도)을 초과하는 23도까지 오른 게 영향을 미쳤다는 말이 나온다.

완도는 전남 미역 양식의 63%를 차지하는 주산지로, 생산 미역의 약 70%가 전복 양식용 먹이로 활용되고 있어 이번 고사 피해가 전복 양식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대책을 마련해 어업인들이 양식에 전복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하멜호 운항 중단 안한다…거문도 주민들 ‘안도’

여수시 선사 요청 수용 중단 철회

거문도와 여수를 잇는 유일한 여객선 ‘하멜호’가 운행을 이어가게 됐다.

14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일 실무 협의를 통해 ‘하멜호’를 운영하는 선사 케이티마린의 요청인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여객선 운항은 이어가기로 했다.

여수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조사업체에 교부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선사에서 요구한 감가상각비, 이차보존금을 신청 받은 뒤 ‘선지급 후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키로 했다.

선사측은 15일부터 예정됐던 운항 중단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다. 선사측이 지난달 26일께 여수시

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등 지급 청구의 소’는 별도로 진행 중이다.

선사측 관계자는 “여수시가 책정한 1분기 지원금 5억여원 정도를 먼저 받으면 두 달치 연료비와 선원 인건비 일부를 충족할 수 있다”며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선지급된 비용으로 운영하며 선주 민들의 불편도 해소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쾌속 여객선 ‘하멜호’를 운영하는 선사 케이티마린은 그동안 여수시에서 운항 결손 보상을 제대로 해 주지 못해 월 1억원 이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하며 15일까지 여수시가 적자 보존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운항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여수시는 그러나 협약에 따라 모두 지급 했다며 더이상의 지원은 이중지원이라는 입장을 보여 갈등을 빚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광주문화신협 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광주문화신협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